

잇단 사고에도 안전 뒷전...노동자 매주 1명 사망

잇지 말고 기억해요

2021년 사건·사고 결산

<4>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 현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작업중인 일용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발주업체가 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가 하면, 정규직 직원이 2명 뿐인 영세 업체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안전조치도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광주·전남 노동자들은 올해도 위험이 노출된 산업 현장에서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올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도 48명에 이른다는 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설명이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도 50건에 달한다.

여수산단 화재 등 산재 되풀이
광주·전남 울들어 48명 숨져
2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많아
이윤 우선에 안전 관리 소홀
양형기준 강화에도 개선 안돼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50건 중 47건의 사고의 경우 노동자들이 모두 설비에 끼이거나 추락, 부딪힘, 감전 등의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다. 결국, 한 달 동안 평균 4명의 노동자들이 귀가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전남 산업현장 안전사고는 새해 벽두부터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0일 여수산업단지 금호티앤엘에서는 30대 하청 노동자가 석탄운송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하루 뒤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고 같은 달 23일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50대 일용

직 노동자가 2층 덱트설치 공사 중 떨어져 숨졌다. 2월에는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에서 공중화장실 공사를 진행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했고 4월엔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월에도 광주 진곡산업단지 내 에어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출기계(플라스틱 부품을 찍어내는 장비)를 훔쳐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의 사고가 산업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한 결과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사고 뒤 합의·처벌 비용이 적게 나온다는 산업 현장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 현장 조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모든 현장에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광주지법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 625만원에 불과한 점도 '노동자 사망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 수위'를 엿볼 수 있는 수치라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또 지난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도 상향됐지만 실제 판결 결과는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전사고 억제력이 제대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고 5~49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시기가 3년 유예 된 점 등은 자칫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50건의 중대재해 중 37건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곳, 50~300인 사업장 6곳, 20인~50인 사업장 4곳이고,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1건 뿐이라는 점은 이 같은 노동계 요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광주·전남 지역 사업장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산업현장 내 사고는 줄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치구, 행정기관, 사업주, 노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농협 임직원들 관행적 '갑질' 눈살

납품 유지 대가 금품...징역형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모 마트 점장 등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납품계약 유지 대가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유통업체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농협 모 마트 점장인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마트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던 B(38)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6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트 납품 계약 유지 및 물량 증대 대가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보낸 현금 1000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B팀장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납품 물량 유지 등 편의제공을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육가공 유통업체 운영자 C씨에 대해 증재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납품편의 제공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범행"이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맡은 업무가 금융 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안에 비해 청렴 의무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씨 5·18 민사재판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듯

전두환씨 사망으로 미뤄졌던 5·18 관련 민사 재판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2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전씨의 상속인이 정해지면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승인, 한정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전씨를 대신해 소송을 승계하게 될 당사자가 정해지게 된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전두환의 상속재산을 29만원 뿐이라며 상속을 포기하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상속인들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나온다.

아들 전재국 씨에 대한 소송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자로 그대로 재판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이 예정된 내년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등 전씨의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씨가 사망해 법원에서 '공소 기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어르신들이 만든 성탄 케익

22일 광주 동구 자산2동 마을 사랑채에서 열린 '할배 요리사 교실'에서 할아버지들이 성탄을 맞아 만든 케익을 들어보이며 솜씨를 자랑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영암군청 홍보실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4명 불구속 입건

영암경찰이 지난 21일 영암군청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전동평 영암군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26곳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